

시선

사설

어렵게 해야 소통이다

‘기말고사 대면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와 학교는 논의 끝에 대면 시험 방식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캠 총학생회는 지난 10일 교육부 세종청사 앞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은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했다. 학생-학교 간 논의가 마무리된 지 겨우 닷새만의 일이다.

한 차례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 결국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지금껏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의 문을 두드려왔지만, 돌아온 것은 무응답과 무대책이었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다. 학생 측은 지난달 11일 교무처가 ‘기말고사 대면 시행’을 공지한 이래 “학생 안전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해온 바 있다. 학생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 우려와 지방 거주자들의 주거 마련 부담에서다.

당시 시각차가 있었다. “교강사 재량에 따라 평가 방식을 정할 수 있다” “기숙사가 부족해 숙소를 지원하기 어렵다” 학생 감염 우려와 주거 문제를 바라보는 학교의 관점이다. 이어 “최선의 방법으로 대면 시험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일견 그렇게 보인다. 대학본부는 슬한 압박감에 놓여왔다. 코로나19 사태는 매 순간 급변했다. 상황이 이런데 미래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사실상 점쟁이들이나 할 일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학교는 학사 일정을 신속하고 만족스럽게 조율해야만 했다. ‘비대면 수업’ ‘등록금 반환’ 갈등도 마

찬가지다. 물론 학생들의 요구에 치열하게 고민했을 것이다.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학생이 몰라주니 학교도 억울하다.

다만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학생에 대한 ‘공감 부재’에서다. 사정을 몰라준 것은 학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압박감에 놓인 학생들은 차악을 고민해야만 했다. 대면 시험으로 인한 ‘감염 위험성’과 비대면 시험으로 인한 ‘불공정 우려’ 중에서도. 한두 가지가 아닌 걱정들에 썩소한 온라인 수업도 겹쳤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런 학생들의 면담 요청을 수차례 미루거나 거부했다.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단칼에 선을 긋거나 책임을 교원 몫으로 넘긴 것이다. 너무나도 손쉬운 소통 방법이었다. 학생 대표들이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재차 행동에 나선 이유다.

어렵게 공을 들여야 만족할만한 소통이 된다. 홍익대와 서강대는 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했다. D학점 이상을 받았을 경우 P(Pass)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홍익대 총학생회가 지난달 ‘전 과목에 대한 학점 포기 허용’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것에 학교 측이 공감을 표한 결과다.

‘소통(communication)’의 어원은 라틴어로 ‘함께 나누다(communicare)’라는 뜻에서 왔다. 바이러스 재난으로 학내 구성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탈진 상태다. 코로나19로 인한 짐을 나눌 때다. 이들 각각이 서로를 포용하는, 진심 어린 소통으로 이번 학기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해본다.

만평 - 갈등을 넘어 연대로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2)

발행인 한군태 | 편집인 남운재 | 편집장 김지원 | 제작/인쇄 중앙미디어디자인(주)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외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역삼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인권은 파이가 아니다

세시봉

김수혁 <기획팀장>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은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로 시작해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로 끝난다.

제1조에서 인권의 기본적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면 제30조에서는 인권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한계를 다루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조항별 의미와 구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설에 따르면 제2조는 인권의 적용에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제3조부터 21조까지는 모든 인간의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권리, 모든 예측상태로부터의 해방, 공정한 재판, 자유로운 발언과 행동 및 사생활의 보호가 필요함을 밝힌다.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자아 계발을 위해 필요

한 노동, 보수, 여가 등의 경제적 권리와 보건, 복지, 교육 등의 사회적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과 학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 조항인 제30조 바로 앞에 등장하는 두 조항, 제28조와 제29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라는 내용이다. 제1조부터 제27조까지가 ‘우리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누려 마땅한가’를 말한다면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해야 마땅한가’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회에 대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의무’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자유를 짓밟하지 않도록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는 체제를 만들어야 할 의무다.

최근 인권을 ‘파이’에 비유하는 주장을 심심치 않게 듣곤 한다. 인권은 경제적 재화와 마찬가지로 한정된 자원이며 개인 혹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은 자신이 ‘인권배분’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이 정의하는 인권은 각자가 점유하기 위해 쪼개고 다뤄야 하는 파이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로 가지는 권리이면서 타인 역시 마찬가지로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 책임이다.

조지 플로이드 씨가 체포 과정에 순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폭력적인 과잉제압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미국 사회의 흑인차별에 대한 누적된 시민들의 분노가 거리로 쏟아져나오고 있다. 플로이드 씨가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숨을 거둘 때까지 걸린 8분 46초라는 시간은 인간 존엄이 모욕당한 시간이다. 플로이드 씨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모욕은 그와 같은 국적을 가진 미국 시민들 만의 일도, 그와 같은 인종 정체성을 공유하는 흑인들 만의 일도 아니다.

물론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착취를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다. 정치와 사회운동이 인권을 논하는 와중에도 가시화조차 되지 않은 차별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인권에는 우선순위가 없다’는 말이 공허한 울림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안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개선에는 개선의 내용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제도의 좁은 시야가 빚어내는 문제의 해결 역시, ‘인권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가치에 대한 인식의 영역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수첩

박창원 기자  
macpark342@khu.ac.kr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청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 청년은 어느 누구를 꼭 집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나이에 있는 이들을 말하는 것뿐이다. 그렇기에 청년이라는 단어는 남성,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사업가, 아르바이트생, 대학생, 고졸자 등 각자의 색깔을 담은 하나의 그릇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사회가 청년을 다양한 눈으로 바라봤는지에 대해서는 그 물음을 쉽게 거둘 수 없다.

이런 물음 속에서 지난 두 달여간 ‘청년정치는 가능한가’라는 대주제 아래 청년정치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다뤄왔다. 2부 ‘페미니즘이라는 단절’에서는 최근 대학가가 마주한 총여학생회(총여) 폐지의 물결을 소개했다. 총여 폐지 과정에서 깊이 있는 논의와 합의 없이 진행된 ‘게으른 민주주의’를 지적했다.

3부 ‘서울과 대학이라는 경계’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논란에

대해 언론에서 연일 ‘청년이 분노했다’고 보도한 것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 재·졸업자, 서울 거주자, 특히 서울권 대학 재·졸업자만을 두고 청년이라 지칭하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서로 다른 출발선을 간과하고 겉과적 공정성만을 이야기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청년을 타자화하고 배제했다는 것과 아울러 범주에 대한 성찰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단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서만뿐만 아니라 청년세대 안에서 발생한 문제와 갈등이 끊임 없이 끓아터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번 기사를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 이야기해보며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실 이번 연재를 시작하기 전 한편으로는 과연 기사의 결론에 공감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지, 나아가 정치를 혐오하는 시대에 정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청년이 있을지에 대해 걱정이 앞섰다. 또한, 취재하기 전까지 청년정치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다소 공감하지 못하기도 했다. 각자 성별부터 나이, 배경, 정치적 성향, 주 활동영역 등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른 것

투성이인 사람들이 하나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번 기사에 인터뷰를 응해준 천하람 대표, 이호석 의장, 류호정 의원뿐 아니라 이전 기사에 인터뷰를 응해준 김정도 전 회장, 이민선 회장 등은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그들은 모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통적으로 느낀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자고 이야기했다. 즉,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박혀있는 차이에 대한 혐오와 여기서 발생한 갈등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더 나은 청년정치를 위해 움직이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비록 다르지만 같았다.

김영희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는 「차이와 연대: 여성운동을 중심으로」를 통해 “차이와 연대는 (···) 장기적 전망을 전체 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둘수록 다른 운동과의 연대를 자기 운동의 외적 과제가 아닌 내적 과제로 삼아야 할 필요가 커진다”고 말한다. 청년정치도 다르지 않다. 청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각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받아들이고 연대한다면 비로소 청년정치는 가능할 것이다.